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출연제도 변경(안 42조, 별표1)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정찬
	담당부서 (과)	서민금융과		직급	5급
	국장	박광		연락처	02-2100-2614
	과장	이석란		이메일	2081043@mail.go.kr

2021. 06. 0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출연제도 변경(안 42조, 별표1)			
	2.규제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2조, 별표1)			
	3.위임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6.09 ~ 2021.07.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상호금융·저축은행권에서 ‘16~’20년 5년간 정책서민금융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한시적으로 출연중이나, ‘21년 이후 사업재원 추가확보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이후 사업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햇살론(연간 약 2.5~3조원 공급중)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 이에 따라 서민금융출연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출연 대상을 상호금융·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1.5.2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상 위임에 따라 출연요율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출연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출연 대상을 상호금융·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1.5.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ul style="list-style-type: none">①공통출연, ②보증이용출연 방식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제도로 변경될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출연요율을 「서민금융법 시행령」에서 규정* 신용보증기금(기업대출),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자금대출) 등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에 대해서 공적 보증 인프라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공통출연요율) 대출잔액에 대해 0.03% 부과② (보증이용출연요율) 보증잔액에 대해 차등하여 0.5%~1.5%부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으로 부담금 변경심의 예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규제집단)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피규제자			1,575,228.11	1,676,416.46	-101,188.35
피규제자 이외				4,274,862.66	-4,274,862.66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서민금융법에 금융회사 출연제도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1,241,584.5	0	282,822.56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p> <p>1. 2. (생략)</p> <p>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매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p> <p>1. 일반자금대출금</p>	<p>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p> <p>-----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연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p> <p>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p>

현 행	개 정 안
<p>2. <u>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 대출금</u></p>	<p><u>가. 은행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p> <p><u>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u></p> <p><u>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u></p> <p><u>나.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채권 중 가계대출채권</u></p> <p><u>다. 상호금융조합 등의 경우 가계대출</u></p> <p><u>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중 개인에 해당하는 대출금</u></p> <p><u>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카드론</u></p> <p><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u></p> <p><u>가. 다른 법령에 따라 출연금 납부대상이 되는 대출금. 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금은 제외한다.</u></p> <p><u>나.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출금</u></p> <p><u>다.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u></p>

현행	개정안
<p>3. <u>종합통장대출금</u></p> <p>4. <u>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u></p> <p>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u><신설></u></p>	<p><u>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u></p> <p><u><삭제></u></p> <p><u><삭제></u></p> <p>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은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보험업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및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제141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 「산림조합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p> <p>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출연금용회사등”이라 한다)는 매월 제2항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0.3(이하</p>

현행	개정안
<p>⑤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농업협동조합중앙회</u>등을 거쳐 <u>진흥원</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u></p> <p>3. <u>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의 명세서</u></p> <p>4. (생략)</p> <p>⑥ <u>농업협동조합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u></p> <p>⑦ <u>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u></p> <p>⑧ <u>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하</u></p>	<p><u>한다.</u></p> <p>⑦ <u>출연금융회사등은 제6항-----</u> ----- ----- <u>진흥원</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 증빙하는 --</u></p> <p>3. <u>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명세서</u></p> <p>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 </p> <p><u><삭 제></u></p> <p> </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p>[별표1]</p> <p><u>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 요율</u> (제42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출연금 요율</th></tr> <tr> <td>농업협동조합</td><td>연 1천분의 0.30</td></tr> <tr> <td>수산업협동조합</td><td>연 1천분의 0.36</td></tr> <tr> <td>상호저축은행</td><td>연 1천분의 0.50</td></tr> <tr> <td>새마을금고</td><td>연 1천분의 0.44</td></tr> <tr> <td>신용협동조합</td><td>연 1천분의 0.41</td></tr> <tr> <td>산림조합</td><td>연 1천분의 0.58</td></tr> </table>	구분	출연금 요율	농업협동조합	연 1천분의 0.30	수산업협동조합	연 1천분의 0.36	상호저축은행	연 1천분의 0.50	새마을금고	연 1천분의 0.44	신용협동조합	연 1천분의 0.41	산림조합	연 1천분의 0.58	<p>[별표1]</p> <p><u>출연금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요율</u> (제42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tr> <th>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th><th>요율</th></tr> <tr> <td>150퍼센트 초과</td><td>연 1.50%</td></tr> <tr> <td>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td><td>연 1.25%</td></tr> <tr> <td>100퍼센트</td><td>연 1.00%</td></tr> <tr> <td>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td><td>연 0.75%</td></tr> <tr> <td>50퍼센트 이하</td><td>연 0.50%</td></tr>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위변제율이란 진흥원이 각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1호의 “신용보증채무”는 이 영 시행 후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출연한 금액”은 이 영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각각 한정한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요율	150퍼센트 초과	연 1.50%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1.25%	100퍼센트	연 1.00%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75%	50퍼센트 이하	연 0.50%
구분	출연금 요율																										
농업협동조합	연 1천분의 0.30																										
수산업협동조합	연 1천분의 0.36																										
상호저축은행	연 1천분의 0.50																										
새마을금고	연 1천분의 0.44																										
신용협동조합	연 1천분의 0.41																										
산림조합	연 1천분의 0.58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요율																										
150퍼센트 초과	연 1.50%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1.25%																										
100퍼센트	연 1.00%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75%																										
50퍼센트 이하	연 0.50%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자금을 공급해옴

○ 그러나, '긴급지원 성격'으로 그때그때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운영기간·재원이 한시적

□ 특히, 현재 서민금융법상 상호금융·저축은행이 납부중인 출연금은 햇살론을 '16~'20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

* 5년간 11조원 공급 목표 → 필요재원 1.8조원 조성(금융권 0.9조원, 정부 0.88조원)

○ '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

□ 한편, 서민금융분야 內 정보비대칭·시장실패 상황*에서 서민의 금융애로는 상시 존재하며, 서민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지속

* 정보부족 등으로 서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여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금리) 부담이 불가피

○ 특히, 최근 최고금리 인하, DSR 도입,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는 등 서민의 금융접근 애로 가중 우려

□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책서민자금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이 필요

○ 정책서민자금 공급 중단시 고금리 부담과 금융접근성 저하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정상적 생활이 곤란해지고 불법사금융 확대 등을 통해 사회불안 초래 가능성

□ 기업·자영업자는 정부가 신보·기보·농신보·중진기금·지역신보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운영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 일반 서민의 생활자금에 대해서도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심의위원회의 부담금변경심의 예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출연제도 종료
	내용	현행 상호금융, 저축은행권 출연을 예정대로 종료
규제대안1	대안명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내용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금융권에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금융권 부담 증가 없음	·'21년 이후 서민자금 공급 중단
규제대안1	·금융소외에 책임있는 전 금융권의 공동책임 구현 및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금융업권·기관별 경쟁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민상품 출시 ·출연금 규모 증가 및 상시출연에 따른 자금공급 확대 여력 확보	·신규 출연 금융업권의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은행연합회	여타 출연금과 중복 배제(주택자금 대출 등)	반영
보험협회	출연기준에서 약관대출 등 제외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 업권별 형평성, 금융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서민자금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현행 유지안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 서민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타당

- 규제대안1의 경우에도 출연부담은 결국 보증공급을 통해 금융권에 환류*되는 구조이므로 수익자부담적 성격도 상존

*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의 부실발생시 대위변제금으로 금융권에 지급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대안1이 업권별·금융회사별로 서민금융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후생 증가

3. 규제목표

☐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완화

☐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자원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

- 보증사업 특성상 현재와 같이 재원이 한시적(자원 총규모가 제한적)인 경우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재원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으나,

* 경기악화 등으로 자금공급 시점에서 예상한 부실률보다 실제 부실률이 커지는 경우 자원부족 발생 가능 → 부실률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 안정적인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보다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용 가능

☐ 출연 금융권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함에 따라 업권별 고객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출시

- 특히, 금융회사별 경쟁을 촉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품 출시 활성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공급이 가능해질 것임
- 금융회사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고객을 확대하는 등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할 이유가 있음
- 또한 정부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어 금융권은 비용보다 편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과도한 규제가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 금융회사 출연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서민금융법 제47조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신용보증기금법(기업자금), 기술보증기금법(기업자금), 주택금융공사법(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자금), 신용보증재단법(자영업자자금)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사업 활성화

- 타 기금의 출연대상, 출연기준, 출연규모를 고려시 서민금융 출연 기준·규모 등은 합리적이며, 중복출연도 없음

타 법령 유사 사례

	신보	기보	주신보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
법적근거	신보법	기보법	주금공법	신보재단법	서민금융법
출연금용기관	은행	은행	은행	은행·상호금융	전금융권
출연대상	기업운영자금	기업운영자금	주택자금	기업운영자금	가계대출금
출연금모 (‘19년, 억원)	8,429	4,888	7,911	854	2,300 (‘22년 예상)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241,584.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41,584.5		1,241,584.5
	간접	333,643.61	1,676,416.46	-1,342,772.85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4,274,862.66	-4,274,862.66

국민			
정부			
총 합계	1,575,228.11	5,951,279.12	-4,376,051.01
기업순비용	1,241,584.5	연간균등순비용	282,822.5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금융기관이 여타 법정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는 없으며, 내부 준법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대외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시 규제미준수 가능성은 낮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기존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납부받고 있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출연금 수취, 보증상품 공급 등이 이루어 지므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18.12.21일 기본방향(「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수차례 업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19.12.24일 세부방안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20.1월 이후 법안 마련·개정과정에서 출연대상, 출연요율 등과 관련하여 업권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

2. 향후 평가계획

- ☐ 향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변경심의, 부담금 운용평가 수행 예정

3. 종합결론

-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금융회사출연제도 시행을 위해 법상 위임에 따라 출연요율 등을 규율하는 시행령의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41,584.5		1,241,584.5
	간접	333,643.61	1,676,416.46	-1,342,772.85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4,274,862.66	-4,274,862.66
정부				
총 합계		1,575,228.11	5,951,279.12	-4,376,051.01
기업순비용		1,241,584.5	연간균등순비용	282,822.5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금융회사
활동제목	출연금
비용항목	기타
비용	1,241,584,502,87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가계대출에 대해 0.03%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보증잔액에 대해 0.5~1.5% 출연요율을 부과
근거설명	출연금은 가계대출잔액에 비례한 공통출연금과 보증사용잔액에 비례한 사용료 개념의 보증이용 출연금 부과 계획

☐ 간접비용

(정량)세분류	금융회사
활동제목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용항목	기타
비용	333,643,619,87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p>금융회사 손실부담액 : 대출공급액×{1-보증비율(90%)}×대위변제율(18%)</p> <p>* 대출공급액(예상) : '22년 37,330억원 → '23년 40,179억원 → '24년 42,656억원 → '25년 44,960억원 → '26년 47,057억원</p>
근거설명	<p>1. 대출공급액에 대해 대출기간(5년) 동안 18%*(=대위변제율)의 부실이 발생**</p> <p>*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을 가정</p> <p>** 매년 공급된 대출의 상환시점 종료 시점의 부실률이 18% 수준으로, 사업초기 부실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년차부터 일정수준으로 안정화</p>

	2. 보증비율이 90% 이므로 대출공급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실발생시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하나,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손실 부담
--	---

☐ 간접편익

(정량)세분류	금융회사
활동제 목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편익항목	이자수익
비용	1,676,416,466,10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간 대출평균잔액×(금융회사 수취금리 8% - 조달비용 및 운영비용 4%)
근거설명	1. 보증부대출상품 금융회사 수취금리 : 8% 가정 2. 조달비용 및 운영비용 : 4% 가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세분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활동제 목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편익항목	이자절감액
비용	4,274,862,668,73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간 대출평균잔액×(20% - 보증상품 금리(8%) - 보증비율(90%)×보증료율(2%))
근거설명	1. 연도별 대출잔액(백만원) : '22년 3,574,961 → '23년 6,231,020 → '24년 8,326,976→ '25년 9,802,336 → '26년 10,646,831 2. 보증부 대출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존에 민간에서 고금리(20% 가정)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고객의 금리부담

	이 9.8% 수준{보증부대출상품 금리 8% + 보증비율 감안한 보증료율 1.8%(보증료율 2%×보증비율 90%)}으로 완화
--	---